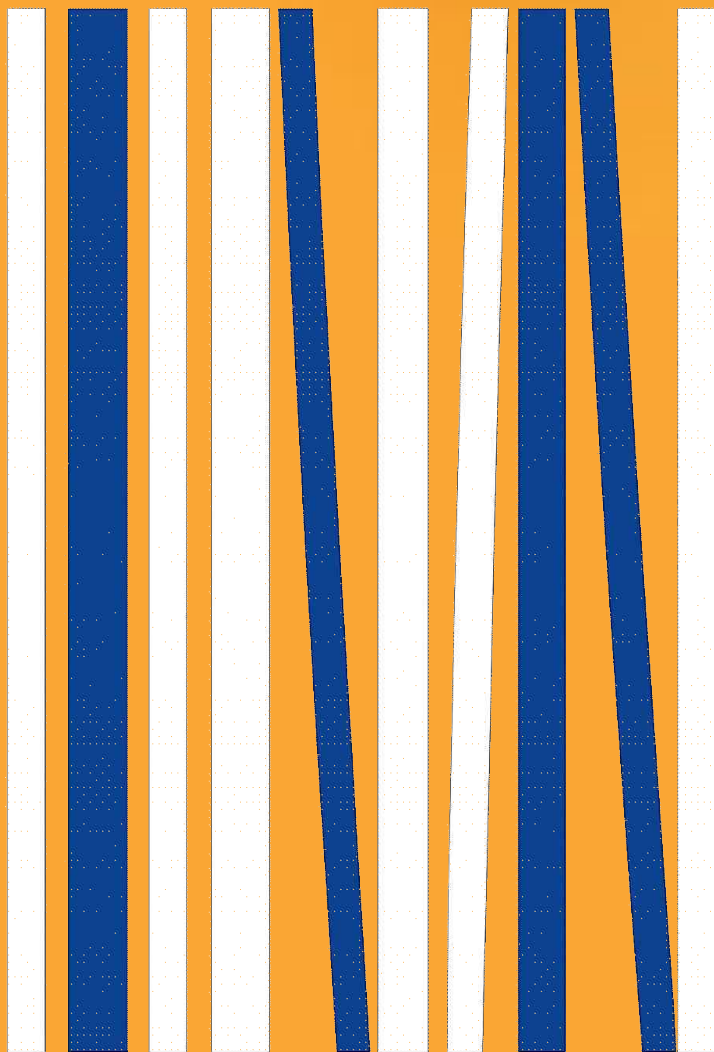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일제침탈사 연구총서》



《일제침탈사 연구총서》는

일제의 한국 침탈과 식민지배 정책의 실상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기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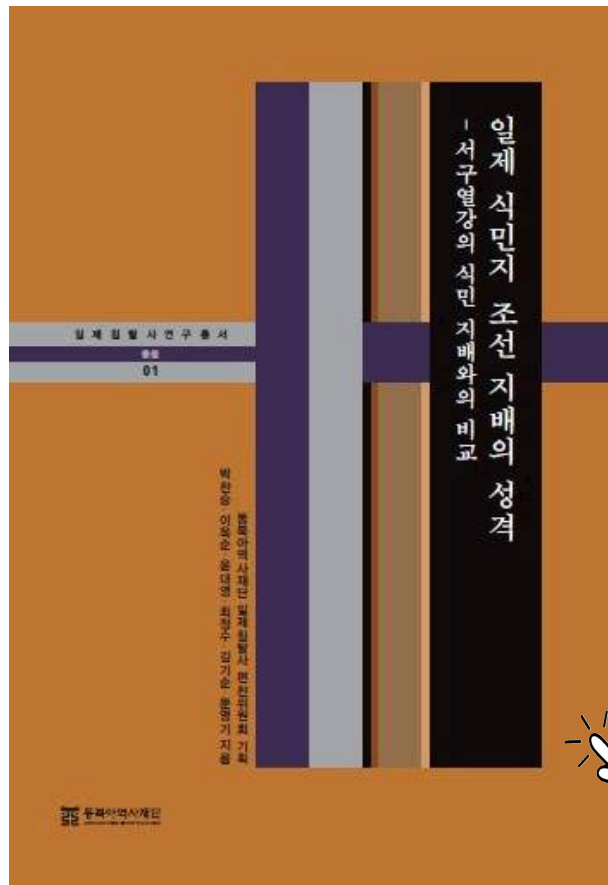
《일제침탈사 연구총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를 중심으로 일제 식민지배의 구조와 정책, 그로 인한 피해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일본 정부와 일부 세력이 식민지배의 책임과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부정하는 현실에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학문적 연구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재단은 한국 학계의 연구 역량을 모아 일제침탈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식민지배의 구체적 실상과 역사적 책임을 밝히 고자 하였다.

《일제침탈사 연구총서》는 일제의 통치와 수탈, 억압과 인권유린을 입체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왜곡된 역사인식에 대응하는 지적 기반을 제공한다.

나아가 식민지배의 피해와 책임을 성찰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위에서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와 동아시아 평화를 모색하는 학문적 토대가 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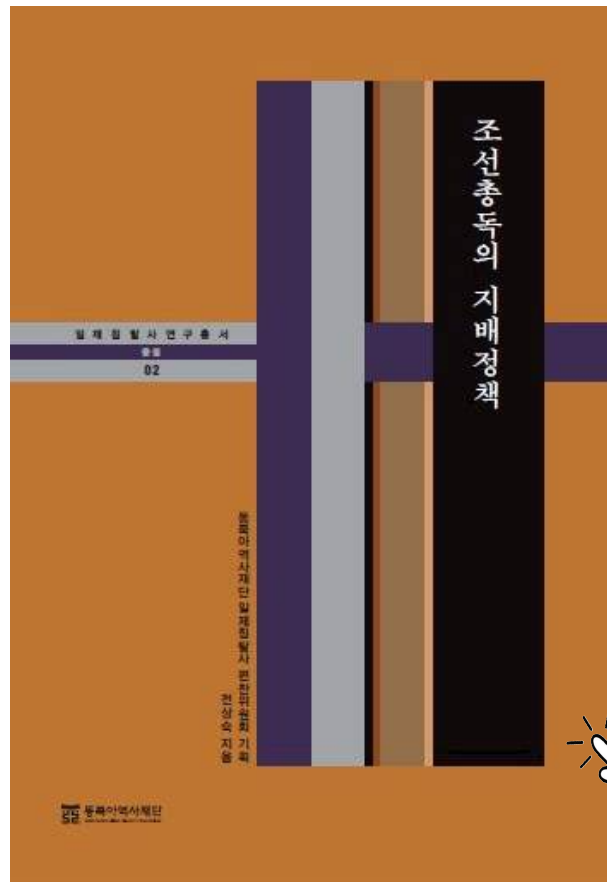
일제 식민지 조선 지배의 성격

서구열강의 식민 지배와의 비교

박찬승 · 이옥순 · 윤대영 · 최정수 · 김기순 · 문명기 저

766쪽 | 30,000원 | 2023년 | ISBN 979-11-7161-047-1

이 책은 일본과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일제 식민지 조선 지배의 성격을 규명한다. 일본은 한국병합 이후 조선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동화 정책은 초기에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으나, 1930년대 중일전쟁 이후 급격히 강화되면서 그 한계를 드러냈다. 동시에 조선은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방파제이자 일본 상품의 시장, 식량 생산기지, 전시 동원을 위한 병력과 노동력 공급지로 기능했다. 이 책은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 정책과 일본의 조선 지배 정책을 비교한다. 이를 통해 일제의 조선 지배가 겉으로는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는 정책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조선을 군사적 방파제이자 경제적 자원 공급지로 활용한 강압적 수탈 체제였음을 보여준다.



조선총독의 지배정책

전상숙 저 | 444쪽 | 20,000원 | 2022년 | ISBN 978-89-6187-7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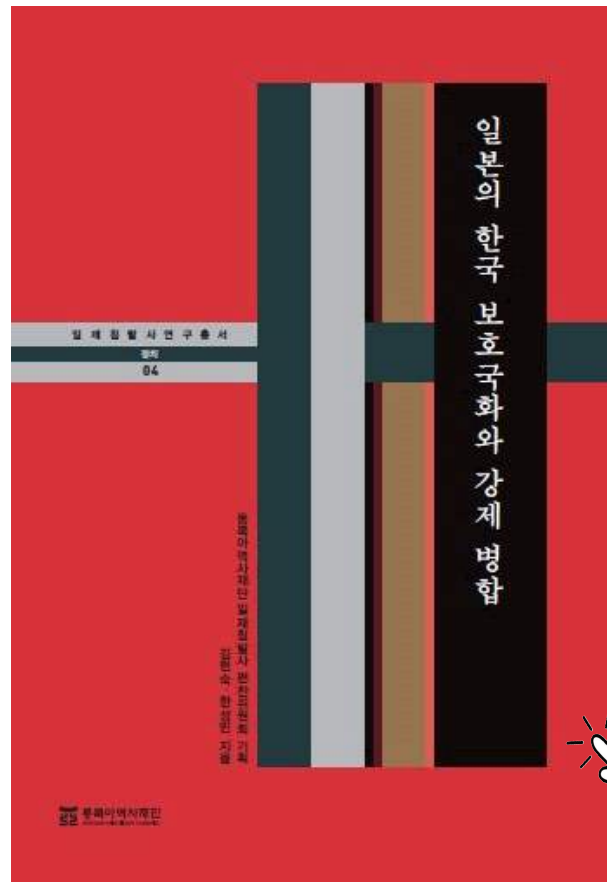
이 책은 일제강점기 조선을 통치한 역대 조선총독의 지배 정책을 통시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특히 연구 시각을 20세기 초 제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전 지구적으로 형성된 근대적 전시 총력전·총동원 체제라는 세계사적 맥락으로 확장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통치를 담당한 ‘조선총독 정치’의 성격을 살펴본다. 조선총독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배 정책을 조선에서 직접 집행한 핵심 권력 주체였으며, 그 통치 방식은 시기별 제국의 대내외 정세와 긴밀하게 맞물려 변화하였다. 이 책은 각 총독의 통치 기조와 정책적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조선총독정치가 식민 지배의 억압성과 수탈성을 어떻게 강화해 갔는지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일본의 조선 식민 지배가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 지배에 비해 그 시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인데도, 유례없이 억압적이고 수탈적이었던 이유를 분명히 밝힌다.



근대 일본의 한국 인식과 침략론

방광석 저 | 416쪽 | 20,000원 | 2024년 | ISBN 979-11-7161-149-2

이 책은 메이지유신부터 한국병합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한국 침략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서다. 메이지유신 시기의 ‘정한론’에서 출발하여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후 1880년대 일본의 조선 인식, 청일전쟁을 계기로 추진된 조선 보호국화 구상과 그 좌절, 러일전쟁 이후 을사늑약과 통감부 설치, 그리고 한국병합에 이르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일본의 한국 지배 방침이 ‘보호’에서 ‘병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한국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종합적으로 규명한다. 관련 연구를 전체적으로 조망한 성과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책은 근대 일본의 한국 침략 인식과 지배 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와 강제 병합

김현숙·한성민 저 | 484쪽 | 25,000원 | 2022년 | ISBN 978-89-6187-7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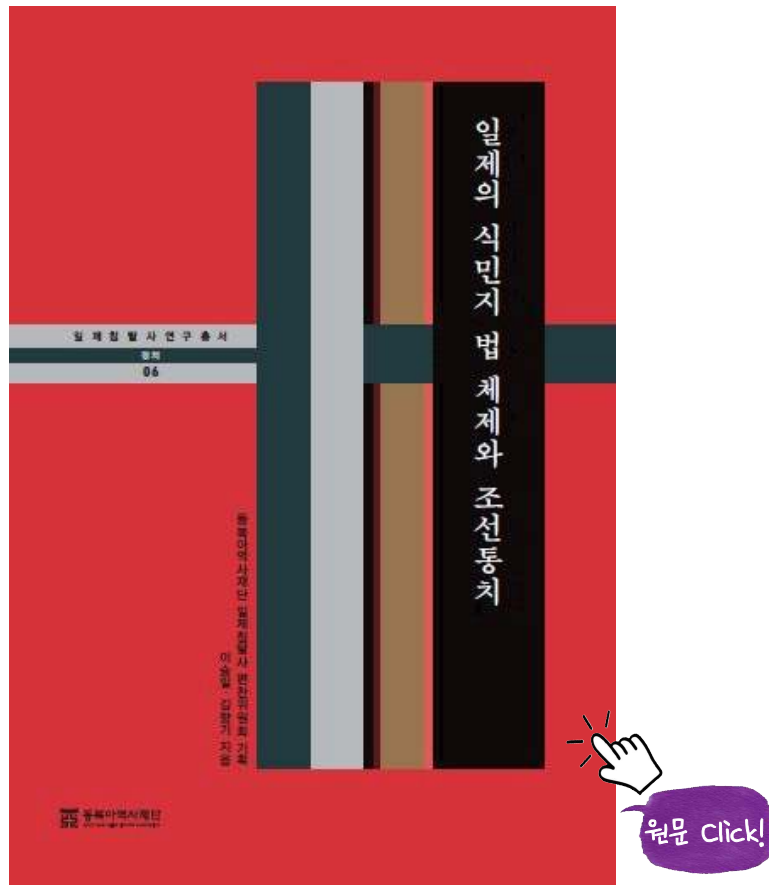
러일전쟁부터 한국병합에 이르는 시기는 제국주의 국가 간의 식민지 쟁탈전이 최고조에 이른 때였다. 한국의 보호국화와 ‘병합’ 역시 이러한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진행되었다. 러일전쟁과 1905년 포츠머스 조약을 전후하여 일본은 열강의 반응과 국제 관계를 면밀히 살펴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한국 보호국화에 대해 세계열강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 책은 동아시아 국제 관계의 변동 속에서 일본의 한국 침탈 과정을 심도 있게 규명한다. 이를 통해 20세기 초 보호국화와 강제 병합으로 나아가는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조선총독부와 식민지 관료 통치기구의 변천과 고등관 인사

김민철 · 이형식 저 | 570쪽 | 25,000원 | 2024년 | ISBN 979-11-7161-1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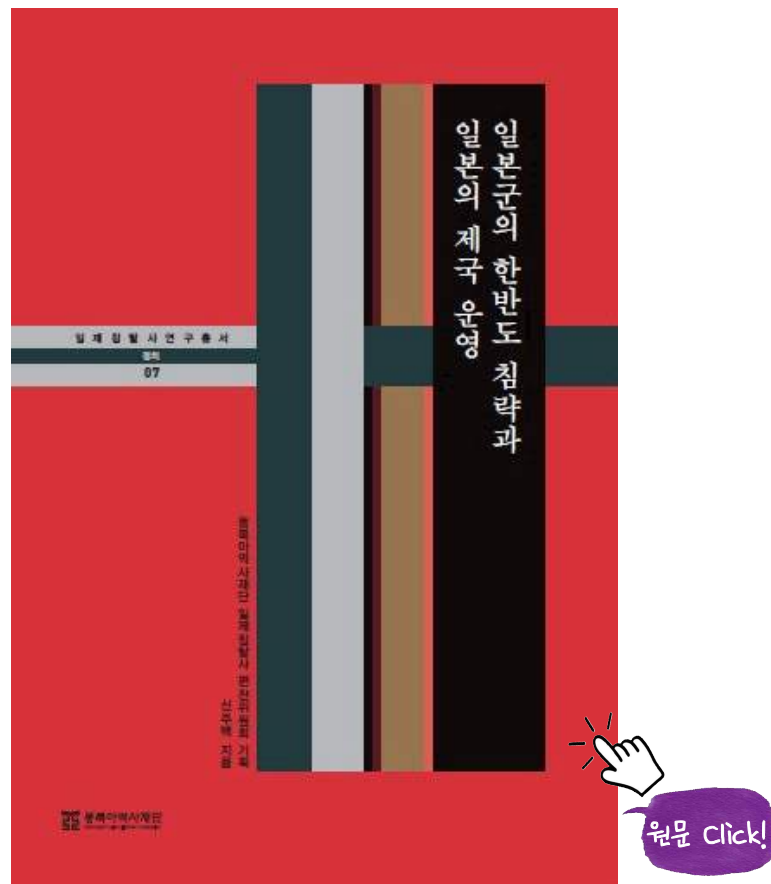
이 책은 식민통치의 핵심 장치였던 조선총독부의 구조와 이를 지탱한 식민지 관료 집단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조선총독부의 통치 체계가 동시대 다른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통치 체제와 어떤 점에서 유사했고, 또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는지를 비교·검토한다. 특히 식민지 통치 구조와 권력 체계를 중심으로 조선총독부와 소속 관서를 제도사적으로 정리하고, 식민지 조선의 통치 엘리트였던 일본인 고등관과 식민 지배에 협력한 조선인 고등관의 구성과 역할을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은 식민통치가 실제로 작동한 방식과 그 권력을 떠받친 인적 기반을 드러내며, 일제 식민 통치의 제도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일제의 식민지 법 체제와 조선통치

이승일 · 김향기 저 | 376쪽 | 20,000원 | 2023년 | ISBN 979-11-7161-0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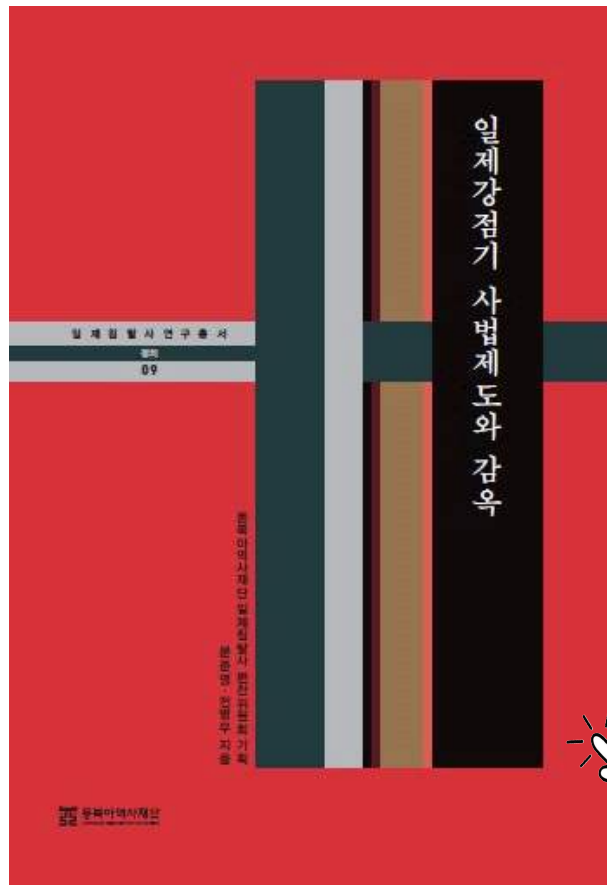
이 책은 일제 식민지 통치의 근간을 이루는 법 체제를 중심으로 조선총독부의 지배 구조를 분석한다. 총독 제령의 내용과 성격, 입법 절차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공포된 「조선민사령」과 「조선형사령」의 구조와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식민지 법제가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이를 재편하는 강력한 통치 수단으로 기능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성문법을 통한 규제와 강제의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또한 법령 제정과 운용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식민지 권력이 법을 매개로 조선 사회를 통제하고 재구성해 나간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제의 통치 의지와 정책 방향은 물론, 본국과 식민지, 중앙정부와 조선총독부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일본군의 한반도 침략과 일본의 제국 운영

신주백 저 | 532쪽 | 25,000원 | 2021년 | ISBN 978-89-6187-6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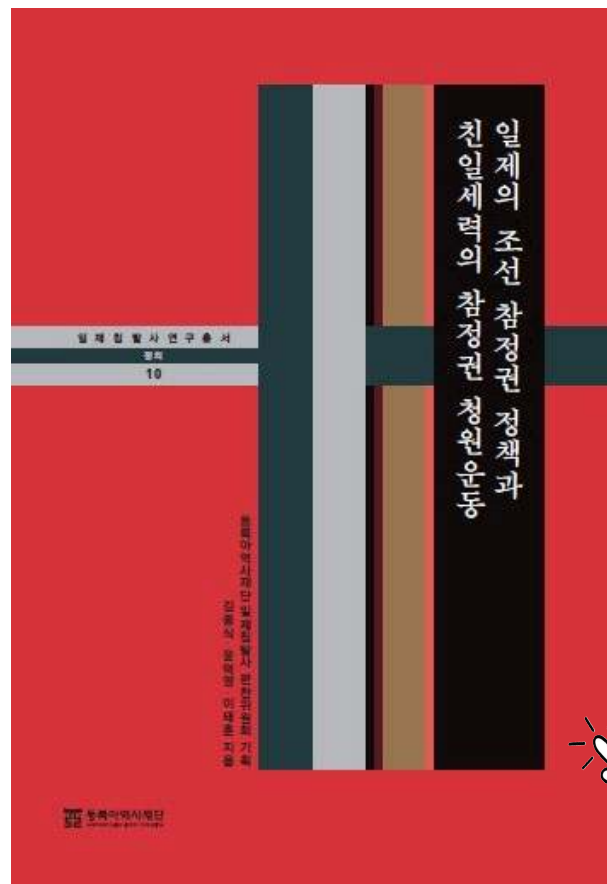
이 책은 1880년경부터 1945년까지 한반도에 주둔했던 일본군의 전개 양상을 군사사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연구서다.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군이 치안 유지와 국방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제국주의 침략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시기별로 분석한다. 특히 대륙 침략과 연동된 군사 활동을 중심으로 일본군의 역할과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추적하고, 이를 식민 통치 정책과 연결하여 해석한다. 나아가 한반도 주둔 일본군의 변화를 통해 일본의 식민 지배 방식과 제국주의적 성격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일제강점기 사법제도와 감옥

문준영·전병무 저 | 556쪽 | 27,000원 | 2024년 | ISBN 979-11-7161-165-2

이 책은 일제강점기 사법제도의 전반을 아우르며 조선총독부 사법 체계의 형성과 운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사법제도의 성립 과정과 법원·검찰 조직의 구조, 민형사 제도의 운용과 인적 구성, 통치 체제 속 사법권의 위상, 변호사 제도의 성립과 활동, 행형 제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룬다. 또한 식민 통치가 근대적 통치의 외형을 갖추었으면서도 식민지라는 특수한 조건 속에서 작동할 수 밖에 없었던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한다. 나아가 사법 관련 법령을 단순한 제도 설명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제정·개정·폐지 과정과 그에 따른 정치적·사회적 파장까지 추적함으로써 식민지 사법제도의 실질적 작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일제의 조선 참정권 정책과 친일세력의 참정권 청원운동

김중식 · 윤덕영 · 이태훈 저 | 448쪽 | 20,000원 | 2022년 | ISBN 978-89-6187-76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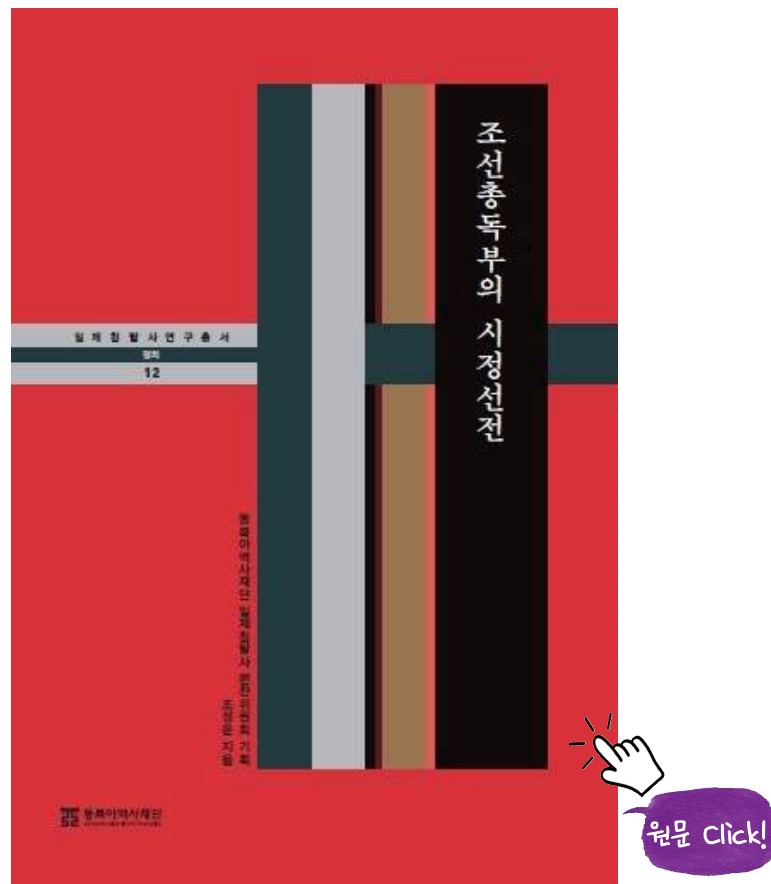
이 책은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근대 국민국가에서 제기된 참정권 문제를 배경으로, 일본 본국의 참정권 확대 과정과 천황제 국가 체제의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식민지 조선의 참정권 정책 변화와 연결해 분석한다. 특히 조선총독부의 자치 정책과 1920년대 참정권 정책의 전개 및 한계를 검토하고, 친일 정치운동 세력의 형성과 자치·참정권 청원 운동의 성격, 구조적 제약을 함께 규명한다. 이를 통해 식민지 조선에서 참정권 문제가 제국의 통치 질서와 식민지 정치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조선총독부의 지방제도 개편

박찬승 저 | 796쪽 | 35,000원 | 2024년 | ISBN 979-11-7161-170-6

이 책은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식민지 조선의 지방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맥락과 제도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통치 시기별 변화 과정은 물론 일본 본국 지방제도의 이식과 변용, 다른 식민지와의 제도적 상호작용, 광복 이후 식민지형 지방제도의 유산과 청산 문제까지 폭넓게 검토한다. 특히 이러한 맥락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상호 연관된 역사적 관계 속에서 치밀하게 재구성하여 식민지 지방제도의 형성과 변동 과정을 입체적으로 밝힌다. 아울러 지방제도의 변화가 식민 권력의 통치 방식과 지역사회 질서 재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사에 새로운 시각과 문제의식을 제시하는 성과로서 관련 학계에 중요한 자극을 제공한다.



조선총독부의 시정선전

조성운 저 | 388쪽 | 20,000원 | 2023년 | ISBN 979-11-7161-048-8

이 책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정보·선전 정책을 중심으로 식민 통치의 작동 방식을 분석한다. 기존 연구가 언론 통제와 탄압에 초점을 맞추어 온 데 비해, 이 책은 총독부의 시정선전이 단순한 억압을 넘어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동화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는 적극적 통치 수단이었음을 밝힌다. 특히 조선총독부가 정보·선전 정책을 활용하여 조선인에게는 식민 지배를 당연한 질서로 인식하게 하고, 일본인에게는 조선 지배의 정당성을 확산시키고자 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조선총독부의 통치 논리가 조선 사회에 침투하고 확산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일제강점기 국내 민족주의·사회주의운동 탄압사

전명혁·조형열·김영진 저 | 400쪽 | 20,000원 | 2022년 | ISBN 978-89-6187-790-9

이 책은 통감부 시기부터 일제강점기 전 시기에 걸쳐 제정, 적용된 민족주의·사회주의운동 탄압 법령을 일본의 법 제정 과정과 비교하여 고찰한다. 아울러 법 집행 과정에서 사상사건(思想事件)을 담당한 조선총독부 주요 경찰, 검사, 판사 등의 경력과 활동도 함께 살펴본다. 그동안의 연구가 주로 일국적 차원에 머물렀다면, 이 책은 식민지 조선과 일본 본국의 관계로 시야를 확장하여 통제 법령의 제정 과정과 적용상의 차이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식민 지배를 가능하게 한 근대적 법치주의의 이면에서 사상 사법체제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 성격과 양상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원문 Click!

일제의 재만 조선인 정책

김주용·김태국·이흥석 저 | 504쪽 | 20,000원 | 2022년 | ISBN 978-89-6187-7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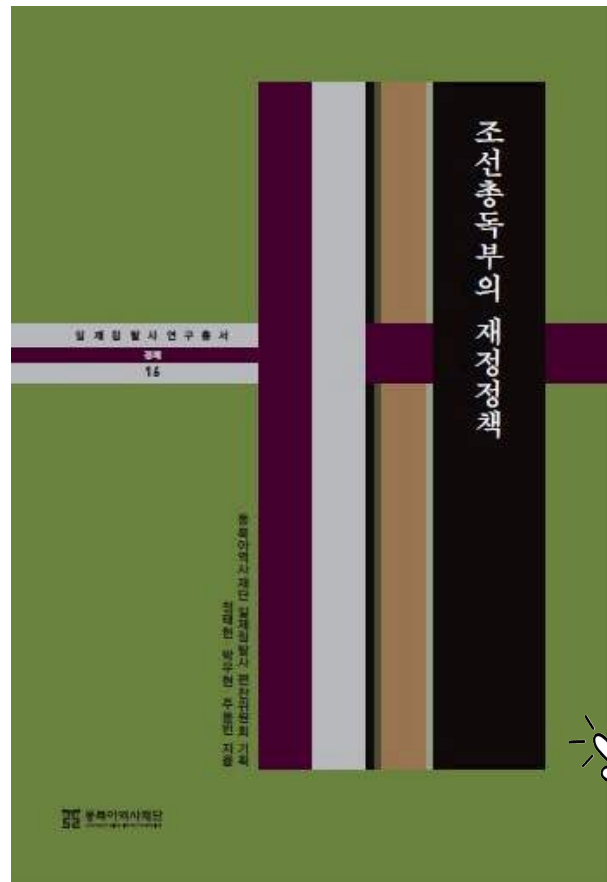
제국주의 일본은 만주 지역 즉 중국 동북지역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거주하던 조선인을 이용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통제와 탄압을 병행하였다. 만주는 일찍부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주요 근거지로 삼았던 곳이며, 이들은 무장단체를 조직해 두만강과 압록강 이남 조선의 식민 통치 질서에 큰 위협을 가하였다. 이 책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제국주의 일본의 만주 침략과 지배 정책 가운데 재만 조선인 정책 중심으로 정리한 연구서다. 재만 조선인의 이주 역사, 일제의 조선인 이주 정책, 재만 조선인 사회의 실상을 살펴봄으로써 만주 침략 과정에서 조선인이 어떻게 동원되고 통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일제 패망 후 조선총독부 · 일본군 · 일본인의 송환과 식민지 권력의 해체

이명중 · 이현주 저 | 462쪽 | 25,000원 | 2025년 | ISBN 979-11-7161-27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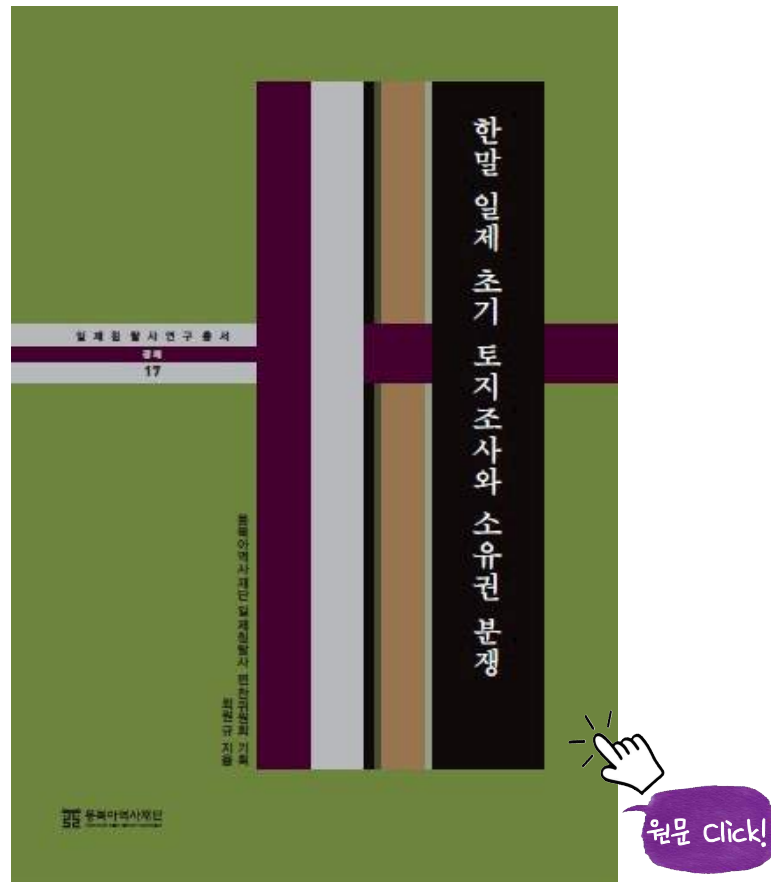
이 책은 광복 직후 한반도에 거주하던 일본인의 송환 과정을 통해 식민 지배의 해체와 탈식민 질서의 형성 과정을 조명한다. 총독부 관료, 일본군, 민간 일본인의 귀환이 각각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살펴 보며, 일본인 송환이 단순한 인적 이동이 아니라 식민 통치의 종식과 새로운 사회 질서의 출현을 보여주는 역사적 전환점이었음을 밝힌다. 또한 해방기 송환 과정을 식민 권력의 잔존과 새로운 질서의 형성이 교차한 복합적 공간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탈식민화가 지닌 불완전성과 그 역사적 유산을 새롭게 성찰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한다.



조선총독부의 재정정책

정태현 · 박우현 · 주동빈 저 | 544쪽 | 25,000원 | 2023년 | ISBN 979-11-7161-04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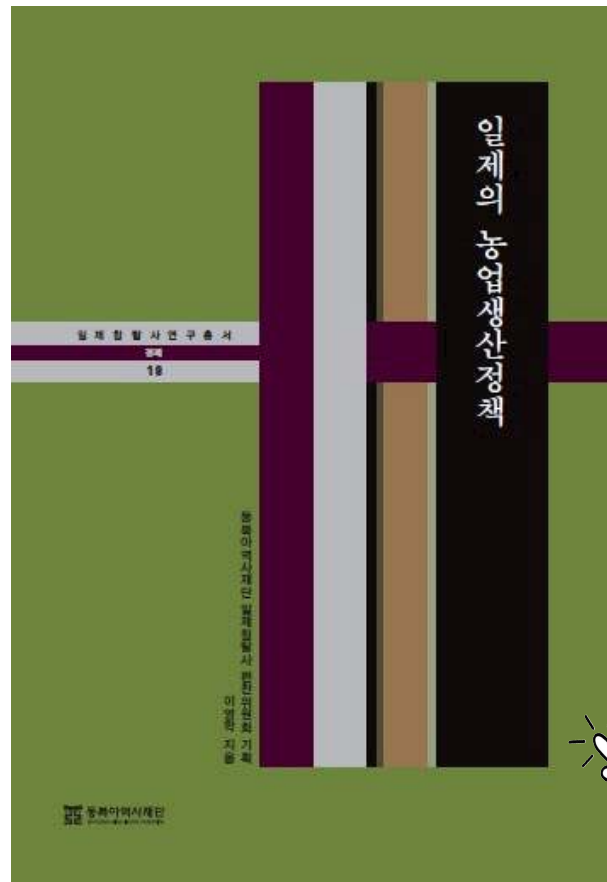
이 책은 개발과 수탈이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일제강점기 재정정책의 전개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와 지방재정을 아우르며 식민지 재정 운영의 구조와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통해 식민 지배를 가능하게 한 경제적 기반을 살펴본다. 특히 식민 지배 기구였던 조선총독부의 재정정책이 제국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근대화 정책과 어떻게 달랐는지를 규명하고, 식민지라는 특수한 조건 속에서 재정이 개발과 수탈의 수단으로 작동한 과정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나아가 재정정책을 통해 식민 권력이 조선의 사회경제적 질서를 재편하고 지배를 강화해 나간 구체적인 양상을 밝힌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식민지 경제정책의 성격과 한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말 일제 초기 토지조사와 소유권 분쟁

최원규 저 | 640쪽 | 30,000원 | 2022년 | ISBN 978-89-6187-75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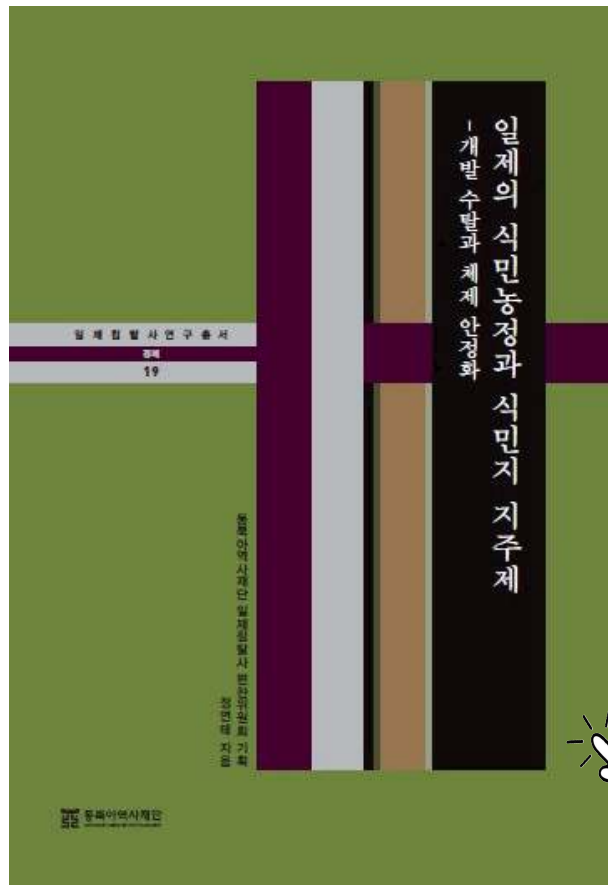
이 책은 구한말의 토지개혁을 포함하여 식민지기의 토지조사사업의 전개 과정과 성격을 본다. 구한말 한국은 농업 중심 사회였으며, 토지는 국가운영과 사회 질서, 경제 구조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요소였다. 일제 식민 당국은 토지 문제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식민 지배 정책의 중요한 대상으로 삼는다. 이 책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여러 국가와 지역의 토지조사 및 토지개혁 사례까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식민지기 토지 정책의 성격을 폭넓게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식민지 경제 분야 연구의 기초를 넓히고, 일제 침탈의 실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일제의 농업생산정책

이영학 저 | 416쪽 | 20,000원 | 2022년 | ISBN 978-89-6187-735-0

1970년대 한국 사학계에서 내재적 발전론이 대두되면서,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은 ‘수탈을 위한 측량’으로, 1920년대의 산미증식계획은 ‘수탈을 위한 증산’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내재적 발전론을 부정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연구 경향의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일제가 농업 정책을 통해 수탈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일본 제국의 관료들은 한국을 근대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침략을 정당화했고, 이러한 논리는 이후 식민사관으로 정교화되었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농업 정책에 담긴 침탈의 논리와 구조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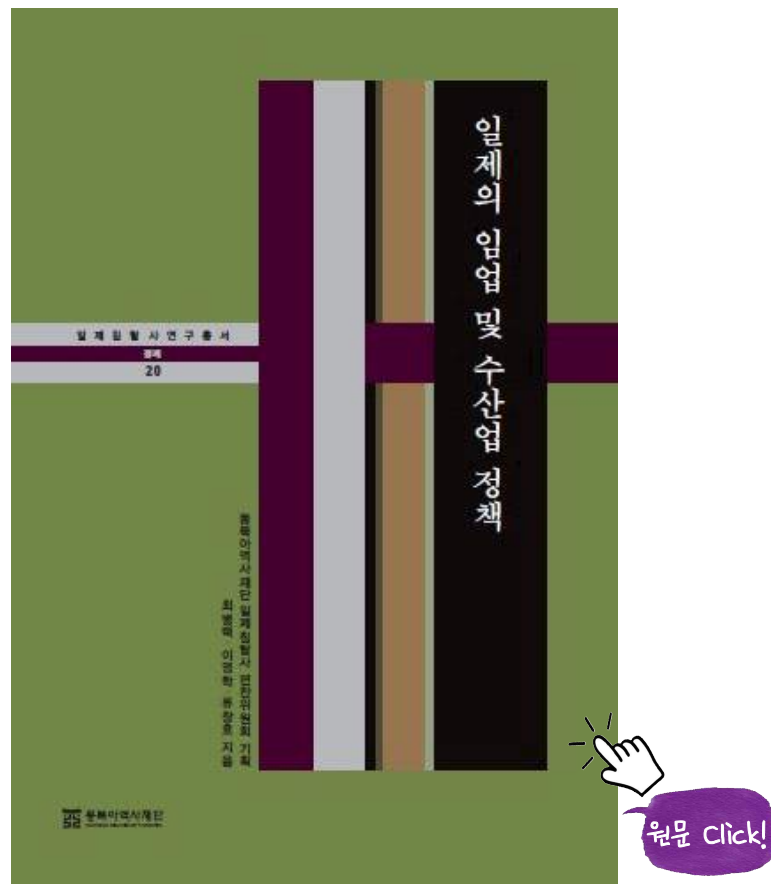


일제의 식민농정과 식민지 지주제

개발 수탈과 체제 안정화

정연태 저 | 612쪽 | 30,000원 | 2024년 | ISBN 979-11-7161-147-8

이 책은 일제강점기 식민농정과 식민지 지주제의 전개 과정을 통해 당시 농촌사회의 구조와 변화를 분석한 연구서다. 토지·농촌·농민 정책의 시기별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 식민 권력이 농촌과 농민을 지배·수탈한 방식과 지주들이 이를 바탕으로 농민을 착취한 구조를 심층적으로 규명한다. 또한 식량과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한 일본 본국의 요구, 식민 통치 유지를 위한 조선총독부의 역할, 그리고 지주와 자본가의 이윤 추구가 어떻게 결합되어 식민농정과 지주제를 변화시켰는지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농촌사회의 실상과 식민지 지배 체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일제의 임업 및 수산업 정책

최병택·이영학·류창호 저 | 520쪽 | 25,000원 | 2024년 | ISBN 979-11-7161-06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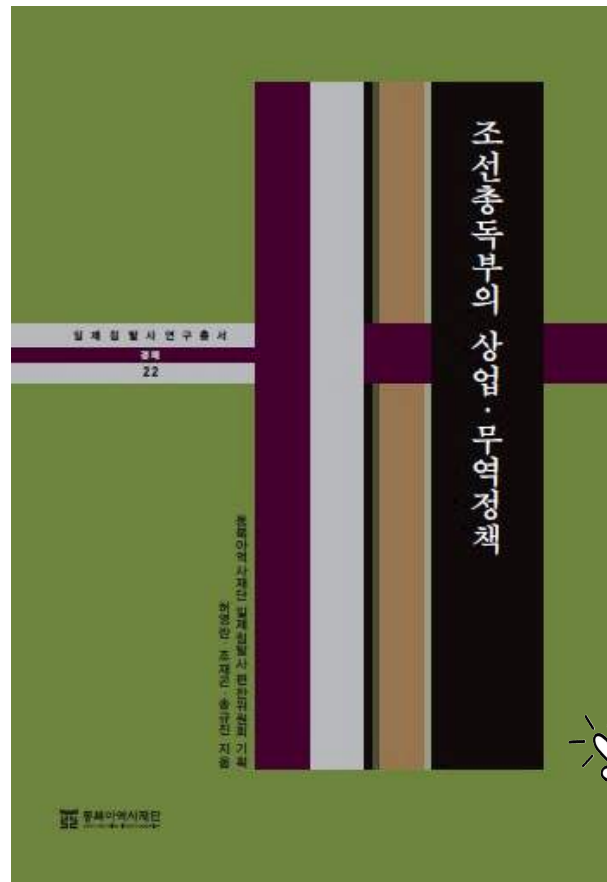
이 책은 일제강점기 임업과 수산업의 변화를 통해 식민지 경제정책의 실상을 조명한다. 임업 부문에서는 산림녹화 정책과 목재 생산 과정에서 드러난 식민지적 산림 이용의 구조와 그 영향을 분석하고, 수산업 부문에서는 일본 어민과 자본이 조선 연해와 어업을 장악해 가는 과정을 추적한다. 특히 자연 자원의 개발과 산업화가 근대화의 이름으로 추진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고 자원을 수탈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자리하고 있었음을 밝힌다. 이를 통해 일제가 한반도의 자연자원과 산업을 식민지 체제에 맞게 재편해 나간 양상과 그 역사적 의미를 입체적으로 살펴본다.



일제강점기 화폐제도와 금융

조영근 저 | 448쪽 | 20,000원 | 2022년 | ISBN 978-89-6187-734-3

이 책은 일제강점기 한국의 화폐제도 및 금융정책, 은행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한국 근대 화폐제도의 식민지성과 근대성을 살펴본다. 특히 조선은행권 발행제도를 일본과 대만의 은행과 비교함으로써 그 특성 및 식민지적 성격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일제강점기 일본 정부 및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화폐·금융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리하고, 개별 정책들이 식민지 경제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한다. 또한 광복 후 화폐제도와 금융기관의 탈식민화 과제 및 발전 방향을 함께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이 책은 일제강점기 정책에 내재된 식민지 지배의 구조와 수탈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조선총독부의 상업·무역정책

허영란·조재곤·송규진 저 | 500쪽 | 20,000원 | 2022년 | ISBN 978-89-6187-791-6

이 책은 일제의 상업과 무역정책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서다.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식민 통치와 관련해서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논의는 국내외 학계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자리해 왔다. 그 가운데 상업과 무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은 식민지 산업화와 근대화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이전 한반도 경제와 자본 성장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식민지화 이후 무역구조와 관세제도, 식민지 통치기구의 변화를 시기별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한반도와 일본의 경제적 관계, 그리고 식민지 경제체제 속에서 드러난 한반도 경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조선총독부의 공업정책

김인호 저 | 578쪽 | 25,000원 | 2021년 | ISBN 978-89-6187-7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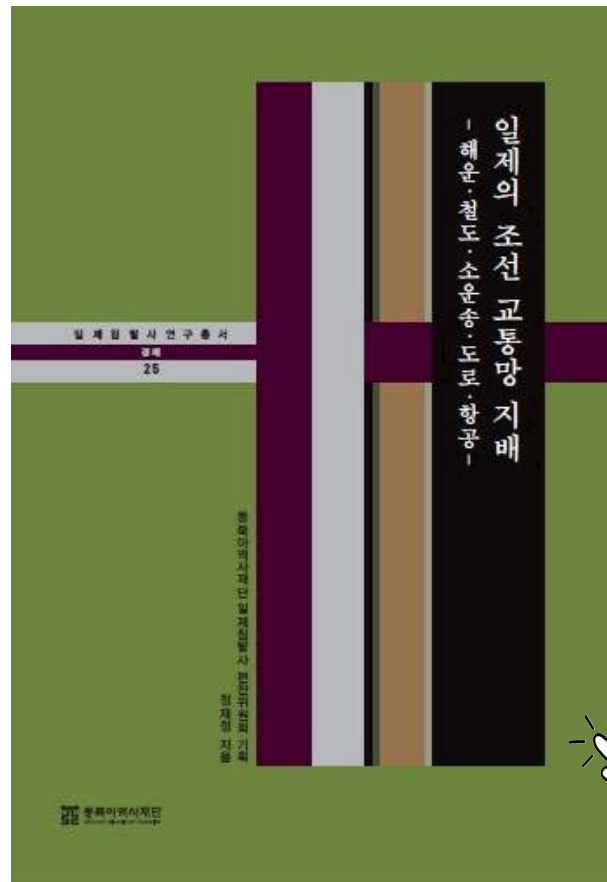
그동안 일제강점기 공업정책 연구는 전면적인 물자동원 체제 등을 중심으로 공업정책이 지닌 수탈적이고 기만적인 성격을 밝히는 데 집중해 왔다. 이 책은 시기별 조선총독부의 공업정책을 정책 구상과 입안 과정, 실행 내용, 추진 전략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그 역사적 위상을 분별한다. 아울러 그 속에서 조선공업의 실상을 지역별·업종별로 확인함으로써 식민지 공업화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조선총독부의 공업정책이 실제로는 본토의 지시에 순응하여 조선인의 희생과 내핍에 기반한 물자 염출에 몰두하였음을 밝힌다. 나아가 그러한 정책이 조선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광복 이후 조선 경제의 재건 과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조명한다.



일제의 광업정책과 광산개발

배석만 저 | 426쪽 | 20,000원 | 2025년 | ISBN 979-11-7161-179-9

이 책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했던 일제강점기 광업사를 본격적으로 조명한 연구서다. 한반도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삼아 광업의 발전 과정을 추적하는 한편, 기존의 경제사 중심 접근을 넘어 정치사적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한다. 특히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 일본 재벌 대자본, 재조 일본인 자본, 조선인 자본 등 광업 발전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관계를 면밀히 분석한다. 또한 광업 분야의 주요 통계자료를 폭넓게 수집·정리하고, 주요 광물의 생산과 유통 추이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일제강점기 광업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복원한다. 풍부한 자료와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이 책은 일제강점기 광업사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참고서이자 기초 자료집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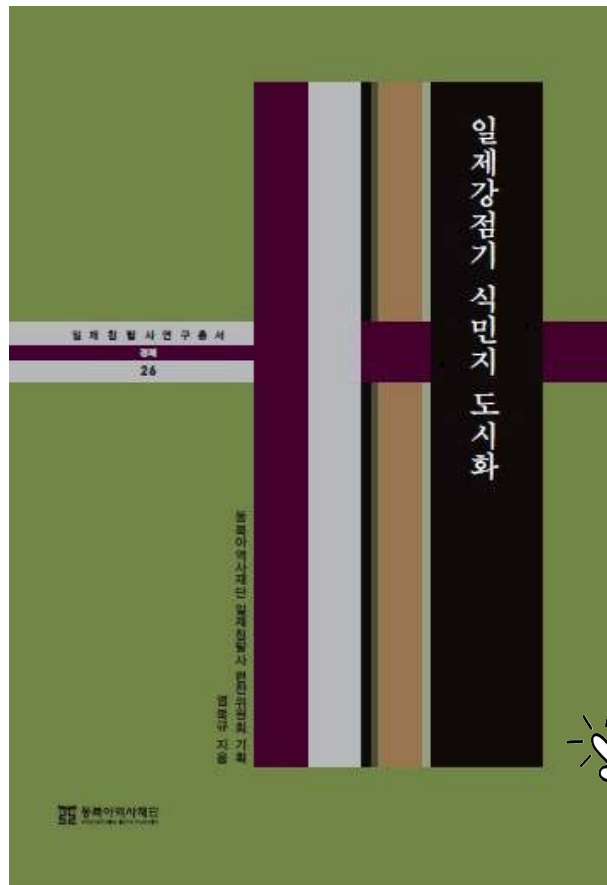


일제의 조선 교통망 지배

해운 · 철도 · 소운송 · 도로 · 항공

정재정 저 | 580쪽 | 25,000원 | 2022년 | ISBN 978-89-6187-7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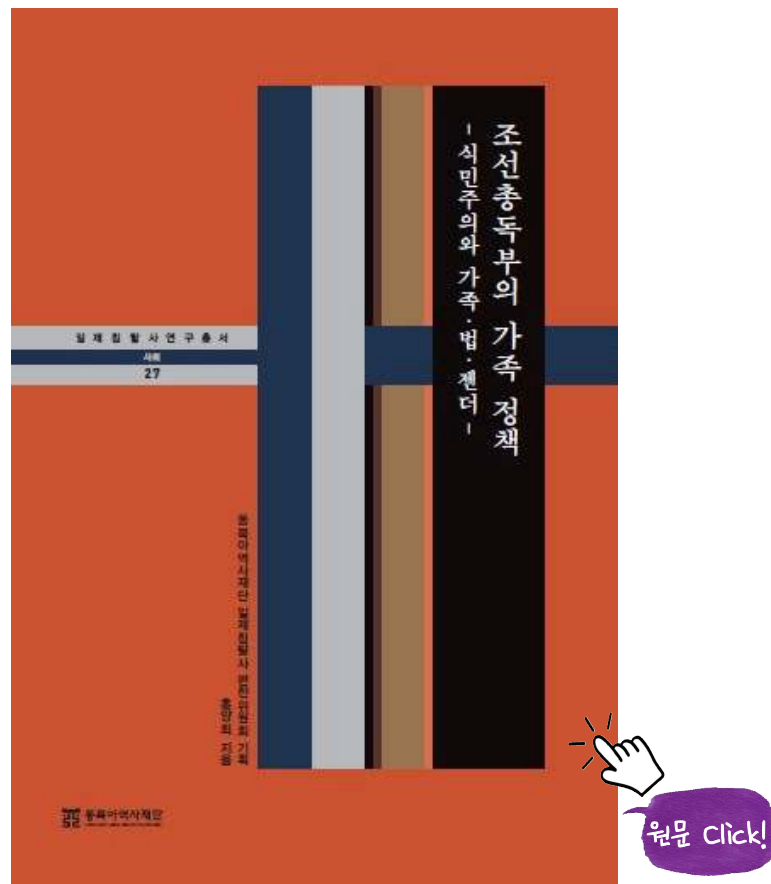
근대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지배에서 교통망에 대한 연구는 ‘근대화’ 또는 ‘산업화’라는 측면뿐 아니라 수탈의 수단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연구과제다. 이 책은 식민지 시기 한반도의 교통망을 해운 · 철도 · 소운송 · 도로 · 항공 등의 기반시설과 기선 · 열차 · 통운 · 자동차 · 비행기 등의 운송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분야에서 대표적인 필자의 연구 성과를 정리 · 종합하면서 교통 관련 인프라 전반의 형성과 변화를 시대순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일제의 식민지 침탈 과정을 교통망의 구축과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통사적으로 고찰하고, 그 속에 내재된 수탈의 구조와 실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도시화

염복규 저 | 416쪽 | 20,000원 | 2024년 | ISBN 979-11-7161-166-9

이 책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도시화의 전반적인 양상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향후 도시사 연구의 발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먼저 일제강점기 제도적 도시의 범주를 설정하고, 도시 행정구역의 변화와 인구 구성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어 식민지 도시의 형성 과정을 신도시와 전통 도시라는 두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개항·철도 부설·군사기지 건설 등 식민지화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도시와 기존 전통 도시의 변화 양상을 비교한다. 또한 도시 공간의 재편이 식민지 통치정책 및 사회경제적 변화와 어떻게 맞물려 전개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도시화가 지닌 식민지적 성격과 그 역사적 의미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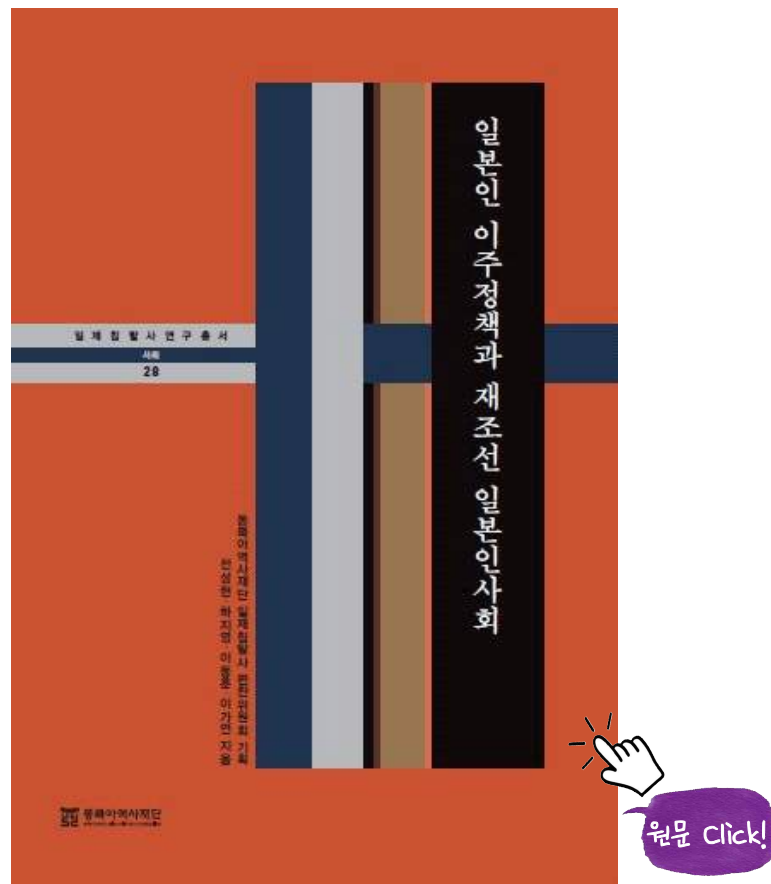


조선총독부의 가족 정책

식민주의와 가족·법·젠더

홍양희 저 | 416쪽 | 20,000원 | 2021년 | ISBN 978-89-6187-676-6

전근대 조선인을 제국주의 일본의 인적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된 지배 메커니즘의 핵심 장치 가운데 하나가 가족제도였다. 이 책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속에서 조선의 가족제도가 재정립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본다. 관습법의 적용 대상이던 조항들이 점차 일본 민법의 방향으로 개정되고, 결국 일본식 씨제도의 도입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조선에서 시행된 가족 관습법의 식민지 정치성을 분석한다. 또한 가족제도의 변화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계가 어떻게 차별적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정치성과 어떻게 연동되었는지를 밝힌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가족제도가 단순한 사적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식민지 지배질서를 재편하는 중요한 통치 장치였음을 조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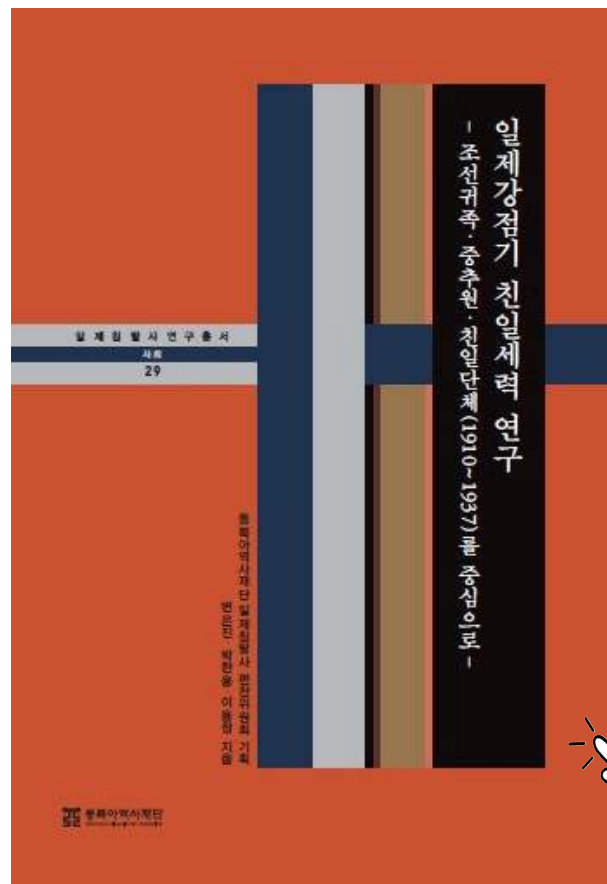


일본인 이주정책과 재조선 일본인사회

전성현 · 하지영 · 이동훈 · 이가연 지

454쪽 | 20,000원 | 2021년 | ISBN 978-89-6187-677-3

이 책은 개항 이후 식민지 시기 재조선 일본인의 이주 과정과 일본인 사회의 형성을 살펴본다. 아울러 식민 권력의 하부를 구성한 재조선 일본인의 독특한 위치와 역할, 그리고 한국사 속에서의 의미를 고찰한다. 재조선 일본인의 이주에 대해서는 식민지 시기 가족 단위의 이주와 정주가 확대되어 가는 시기적 변화를 인구의 추이를 통해 확인한다. 또한 개항 이후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들이 자신들만의 사회를 구축하고 식민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인 공동체 유지를 위해 독자적인 문화와 제도를 조선에 이식했음을 분석한다. 그 대표적 사례인 신사와 유곽을 중심으로 재조선 일본인 사회에 내재한 식민성과 폭력성을 밝히고, 이를 통해 재조선 일본인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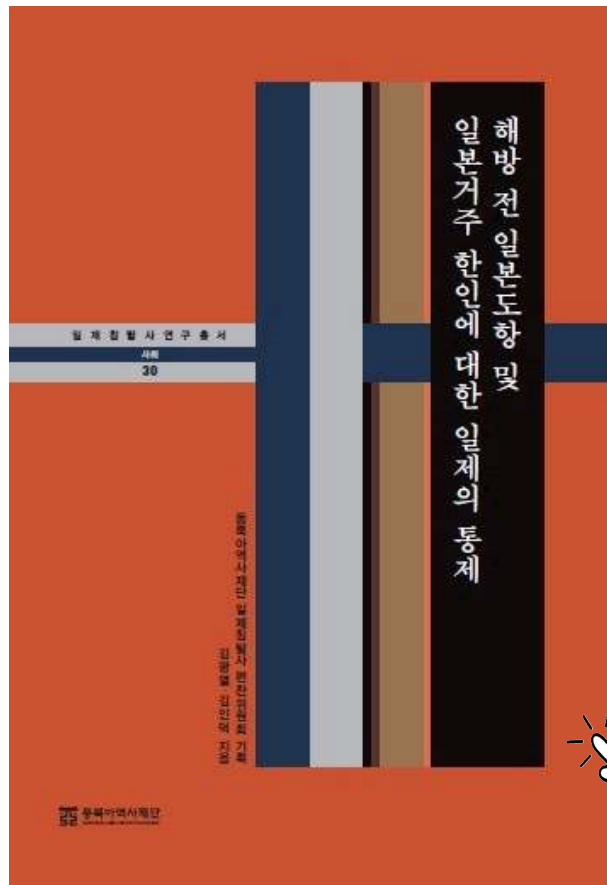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친일세력 연구

조선귀족·중추원·친일단체(1910~1937)를 중심으로

변은진·박한용·이용창 저 | 550쪽 | 30,000원 | 2022년 | ISBN 978-89-6187-770-1

이 책은 일제강점기 ‘친일세력’의 형성과 활동을 다룬다. 일제강점기 친일세력은 일제 식민 통치의 본질과 특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주제다. 식민지 지배자는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 ‘민족분열’ 정책을 활용하며, 이를 통해 피지배 사회 내부의 균열과 협력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통치 방식은 식민지 지배가 끝난 뒤에도 해방 사회에 복잡한 과제를 남겼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친일세력을 둘러싼 이러한 문제들을 일기 쉽게 정리하고, 식민지 시기를 네 단계로 구분하여 친일세력의 변화 양상과 식민 통치의 본질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원문 Click!

해방 전 일본도항 및 일본거주 한인에 대한 일제의 통제

김광열 · 김인덕 저 | 368쪽 | 18,000원 | 2022년 | ISBN 978-89-6187-758-9

일제강점기 식민지 본국에 거주한 식민지민에 대한 연구는 근대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를 큰 틀에서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주제다. 현재 일본의 자이니치, 헤이트 스피치, 혐한론 등에 대한 이해 역시 식민정책과 제국의 구조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식민지기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이동한 한인들의 도항 상황과 일제 치안 당국이 한인의 일본 도항을 통제하기 위해 실시한 각종 정책, 그리고 일본 거주 한인의 거주 및 생활 양태를 고찰한다. 특히 민족차별에서 비롯된 조선인 학살 사건을 함께 다룸으로써, 식민지 지배가 일본 사회 내부에서 어떠한 차별과 폭력의 구조를 형성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 책은 재일 한인의 역사적 기원과 한일 역사 현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제의 의료정책과 조선 지배

박윤재 저 | 376쪽 | 20,000원 | 2023년 | ISBN 979-11-7161-0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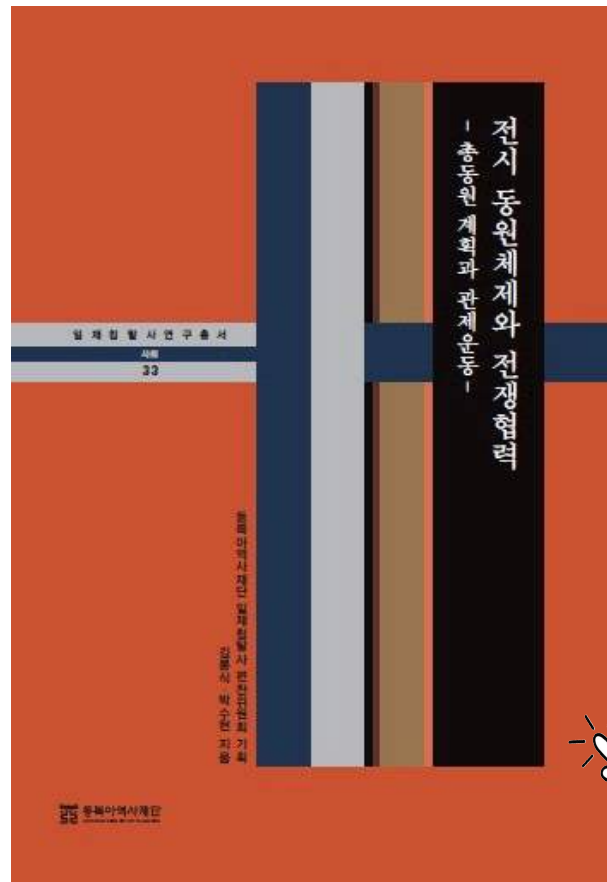
일제의 조선 지배에서 문명화는 중요한 명분으로 작용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의료정책과 위생, 질병 치료 등은 문명화의 척도로 제시되었으며, 그 결과 일제는 조선을 통치하는 과정에서 위생과 질병 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병원, 방역, 법률, 교육, 한의학 등을 포함한 의료정책의 실태와 식민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의료정책의 기초가 형성된 1910년대, 그 기초가 확대된 1920~1930년대, 그리고 전시체제 아래 의료정책이 재편된 1937~1945년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이를 통해 일제 의료정책이 표면적으로는 문명화와 근대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통치 질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했음을 밝힌다.



일제의 ‘내선일체’ 표방과 황민화 정책

이정선·김승태·이대화 저 | 402쪽 | 17,000원 | 2024년 | ISBN 979-11-7161-163-8

이 책은 내선일체와 황민화 정책의 핵심 주제를 균형 있게 다룬 연구서다. 내선일체의 구조와 개념을 비롯해 신사참배, 창씨개명, 내선결혼 등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아, 전시체제가 조선 사회에서 황민화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제들이 개별적으로 분석되는 경우가 많아 식민지 통치의 맥락 속에서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작동했는지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 책은 각 정책을 단순한 개별 사례가 아니라 하나의 통치 전략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내선일체와 황민화 정책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전시체제가 조선 사회와 식민지 지배의 동화·동원 전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사적 의의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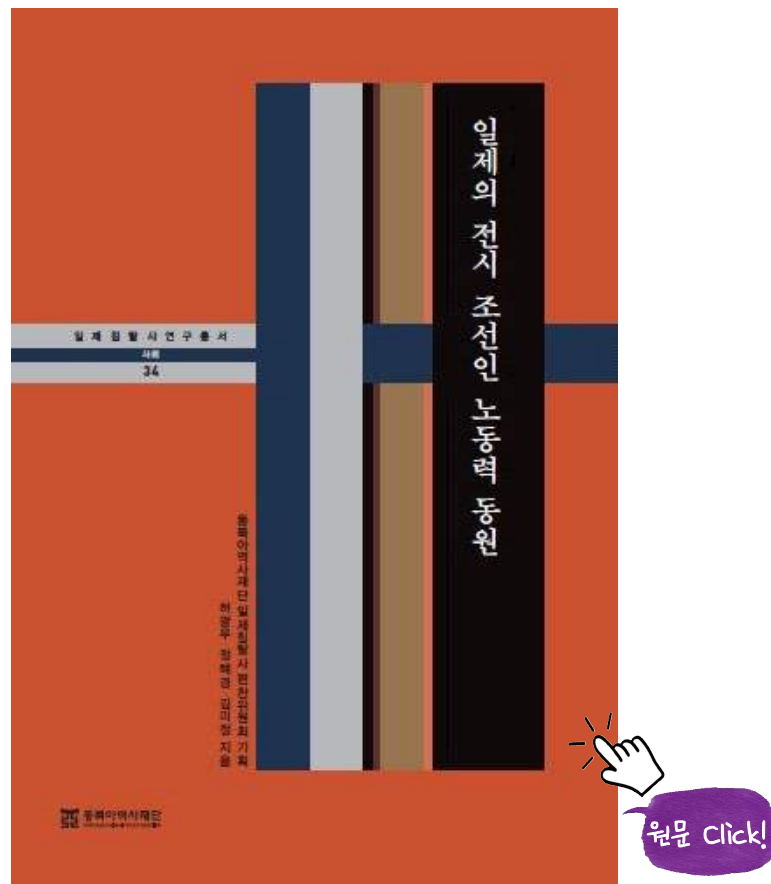


전시 동원체제와 전쟁협력

총동원 계획과 관제운동

김봉식·박수현 저 | 428쪽 | 20,000원 | 2022년 | ISBN 978-89-6187-757-2

전시기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 적용하고 관철하고자 한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총동원 계획의 수립과 그 운용 기구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전시 총동원 체제 관련 연구는 식민지 수탈이 1930년대 전쟁 확대 이후 더욱 심각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과제다. 이 책은 식민지 조선에 시행된 총동원 체제의 의미와 배경, 총동원 계획, 국민정신총동원운동, 국민총력운동, 식민지민의 전쟁 협력 등을 정리하고 그 구조적 특질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전시기 식민지 조선에서 인적·물적 자원이 어떻게 동원되고 수탈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전시기 식민지 수탈의 구조와 실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일제의 전시 조선인 노동력 동원

허광무·정혜경·김미정 저 | 680쪽 | 30,000원 | 2021년 | ISBN 978-89-6187-670-4

이 책은 강제동원 피해 가운데 노무동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일본 제국과 점령 지역으로 동원된 역사적 사실을 동원의 방식과 유형,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또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강제동원 희생자와 유골 문제, 지급되지 않은 미불금 문제, 강제동원 역사 왜곡 문제 등을 정리한다. 특히 강제동원 연구에서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동원과 아동 동원을 함께 다룸으로써 노무동원이 지닌 비윤리성과 폭력성, 불법성을 밝힌다. 그동안 여러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지만, 강제동원 문제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이 책은 강제동원의 역사적 실상과 남겨진 과제를 이해하고, 관련 연구의 확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일제 침략전쟁과 군인·군속 동원

황선익·김명환·김상규·조건 저

464쪽 | 20,000원 | 2023년 | ISBN 979-11-7161-051-8

이 책은 일제 병력동원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피해 사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동원의 유형과 양상을 군인과 군속, 육군과 해군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일제는 1938년 이른바 지원병 모집을 시작으로 1944년 징병제 시행에 이르기까지 병력동원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이 책은 각종 명분 아래 이루어진 병력동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 확대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일제 침탈의 피해 양상을 밝힌다. 또한 ‘지원병’으로 전장에 동원되었음에도 징병으로 잘못 다루어진 사례, 공용으로 현지 동원되었지만 일반 군속과 구분 없이 다루어진 사례들을 별도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전장 동원이라는 공통점 속에서 모호하게 이해되어 온 동원의 상황과 신분을 사실관계에 따라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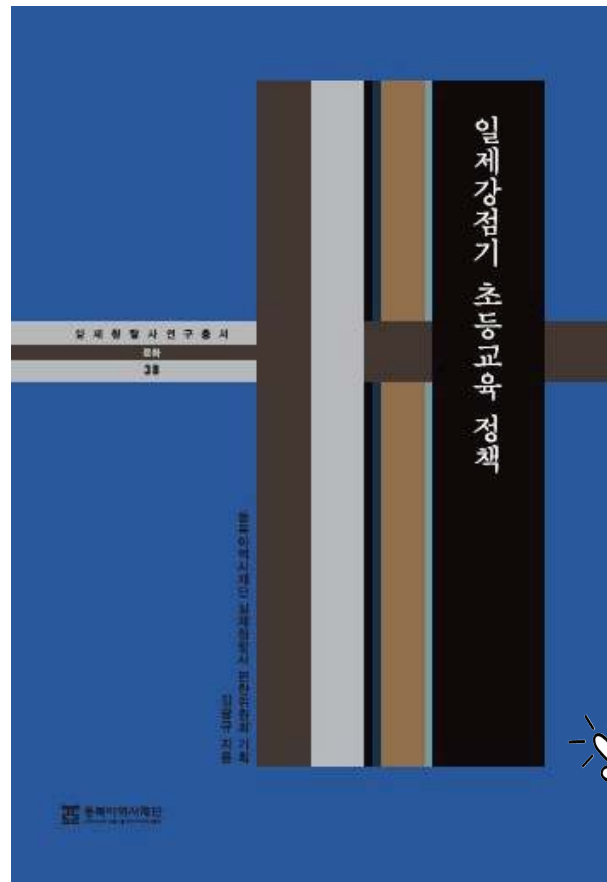


원문 Click!

일제말 전시 총동원과 물자 통제

이송순 저 | 440쪽 | 20,000원 | 2021년 | ISBN 978-89-6187-6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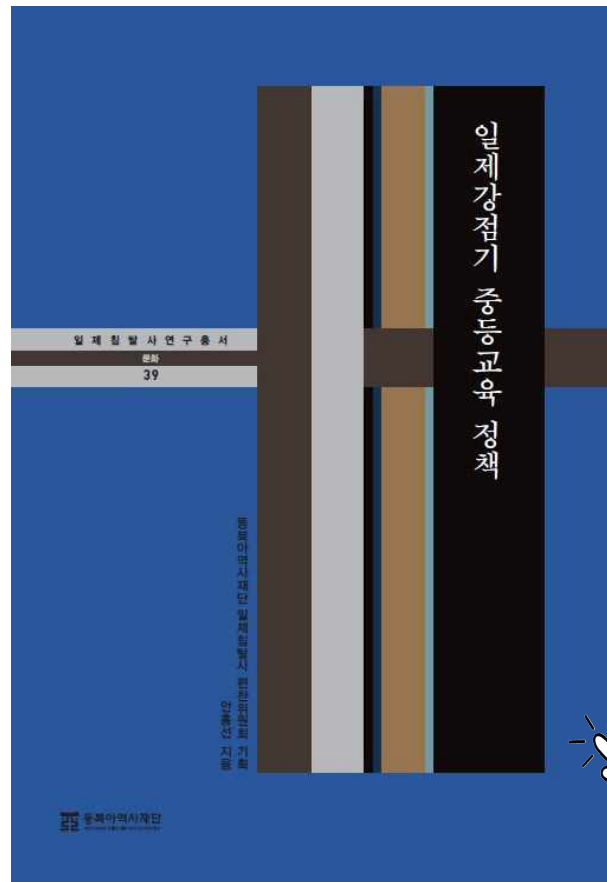
이 책은 일제 군국주의 파시즘 체제하에서 침략전쟁이 도발·확대되고 패전에 이르는 과정과 전시 총동원이라는 총력전 체제 속에서 일본제국주의가 식민지 조선에 행한 물자동원과 수탈의 과정 및 내용을 살펴본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본 본국과 식민지 사회는 단순 재생산조차 불가능한 축소 재생산 과정에 빠져들었고, 일본제국주의의 몰락은 시간문제에 불과했다. 마침내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과 함께 조선은 해방되었지만, 해방이 곧 식민 지배의 제도와 그 결과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전시 물자동원 과정에서 파생된 각종 제도와 시스템, 인식은 해방 이후 새로운 독립국가 건설 과정에도 여러 흔적을 남겼다. 이 책은 일제 전시 총동원 체제기에 어떠한 제도를 통해 식민지 조선의 물자가 동원되고 수탈되었는지를 정리한다. 이를 통해 전시기 식민지 지배의 구조와 그 역사적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일제강점기 초등교육 정책

김광규 저 | 440쪽 | 20,000원 | 2021년 | ISBN 978-89-6187-6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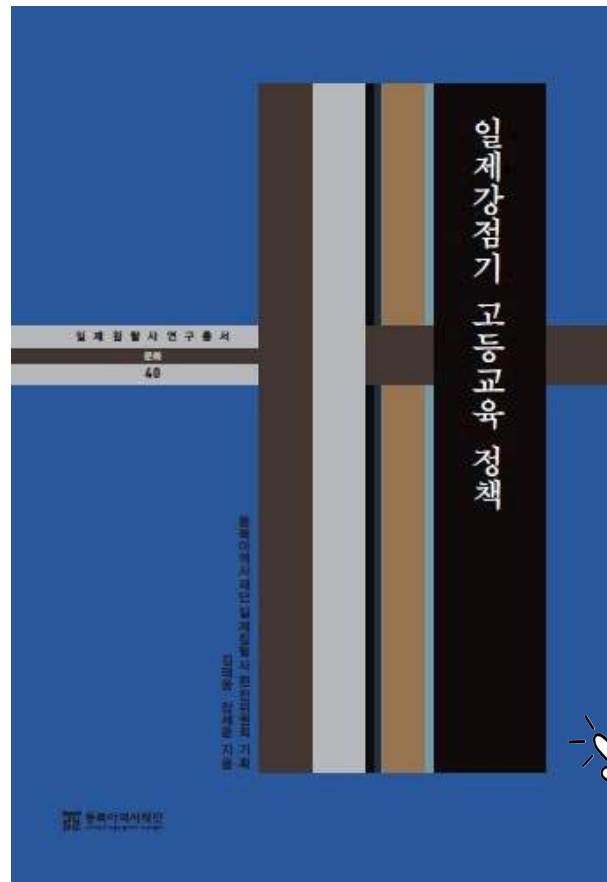
이 책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초등교육 정책이 수립된 이유와 배경,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 그리고 이에 대한 조선인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또한 학교 제도와 교육 과정, 교과서, 교원, 학생, 학교의 일상, 교육재정 등 초등교육을 둘러싼 여러 주제를 포괄적으로 살펴 본다. 무엇보다 관보와 통계연보를 비롯해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공문서 등 관찬 사료뿐 아니라, 당시 신문·잡지 기사, 개인의 일기와 회고록 등 다종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자칫 건조해지기 쉬운 정책사 서술을 가능한 한 생생하고 풍부하게 재구성하고자 했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초등교육이 어떠한 정책적 의도 아래 운영되었고, 그 현상이 실제로 어떠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일제강점기 중등교육 정책

안홍선 저 | 552쪽 | 25,000원 | 2021년 | ISBN 978-89-6187-67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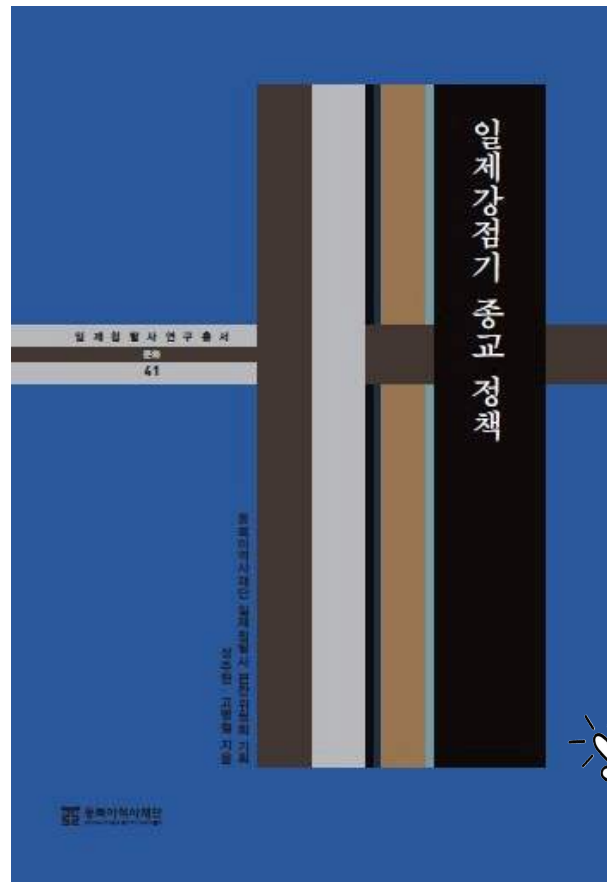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중등교육은 일반계 학교인 남자 대상의 고등보통학교와 여자 대상의 여자고등보통학교, 그리고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실업계 학교로 크게 구분된다. 이 책은 당시 식민지 조선의 교육제도와 일본 본토의 교육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식민지와 제국 사이의 지역적 차이를 분석하고, 각 학교의 특징 또한 비교·분석한다. 일제강점기 교육은 일본의 제국주의 지배 전략에 따라 시행된 식민지 교육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근대 교육 형성의 한 과정이라는 양면적 성격을 지닌다. 이 책은 광복 이후 교육 개혁 과정에서 식민지 시기 중등교육이 어떠한 점에서 비판받았는지, 그리고 식민지 교육을 청산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이후 우리나라 중등교육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본다.



일제강점기 고등교육 정책

김태웅·장세윤 저 | 656쪽 | 30,000원 | 2022년 | ISBN 978-89-6187-7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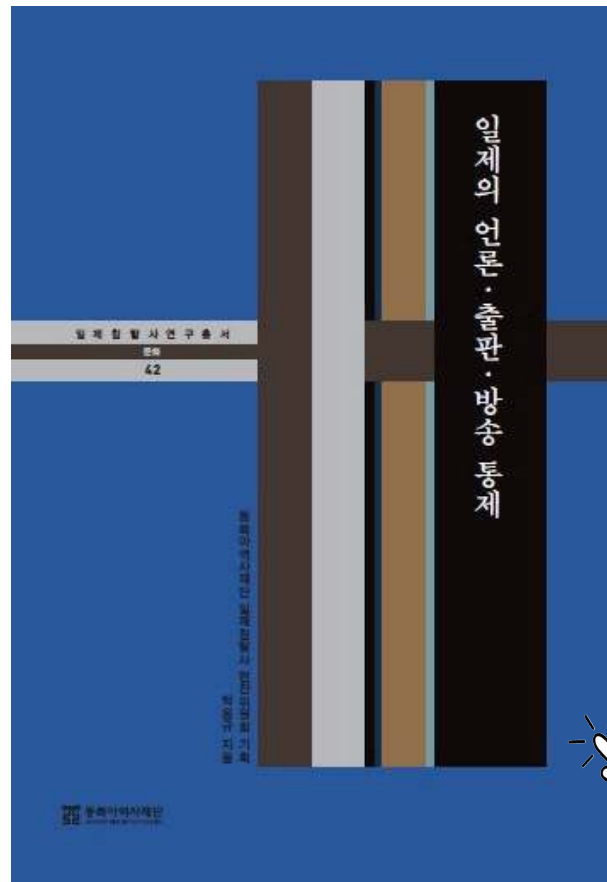
이 책은 일제강점기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정책을 종합하여 정리한 연구서다. 식민지 교육 정책은 식민 통치의 중첩적 성격과 양면성을 보여주는 분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교육 정책은 문명화, 우민화, 자주성 등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식민 통치와 정책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식민 당국이 신중하게 추진한 분야였다. 이 책에서는 19세기부터 광복 이후까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다룬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 정책이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 양성, 교육 기회의 제한, 민족교육의 전개와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 살펴본다. 또한 초·중등교육 정책 연구서와 함께 근대 한국 민족교육의 전체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일제강점기 종교 정책

성주현·고병철 저 | 510쪽 | 25,000원 | 2021년 | ISBN 978-89-6187-7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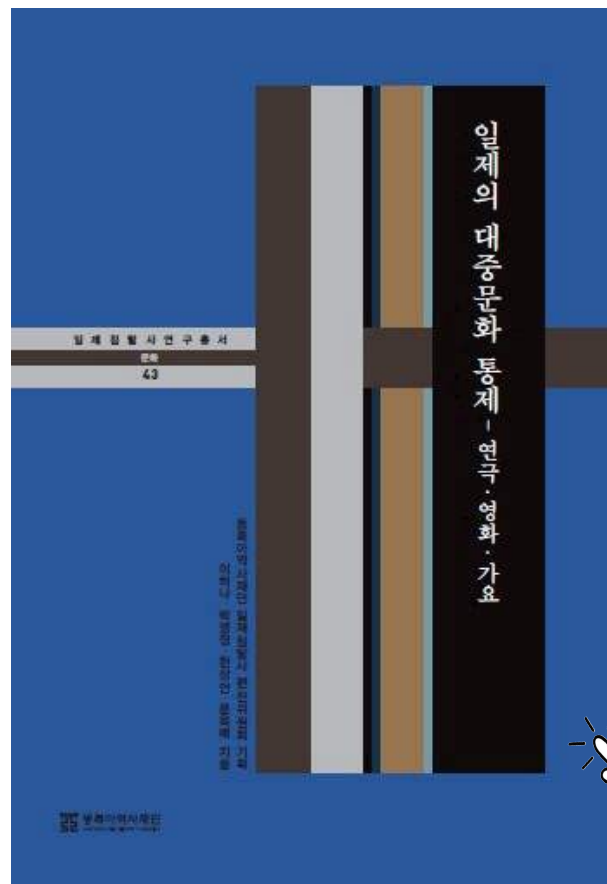
일제강점기의 종교 정책을 연구할 때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는 종교 법규 부분이다. 또한 종교 정책에 대한 종교계 반응 역시 빠뜨릴 수 없는 연구 주제다. 이 책은 통감부와 조선총독부 시기의 종교 법규, 종교 정책, 종교계 대응을 서로 연관 지어 살펴봄으로써 일제강점기의 종교 지형을 이해하고자 한다. 종교 법규와 종교 정책은 종교별 역사적 흐름에 따라 검토하고, 종교계의 반응으로 종교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건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일본 제국주의의 종교 정책을 통시적 관점과 공시적 관점에서 조망한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의 종교 지형을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일제의 언론·출판·방송 통제

박용규 저 | 405쪽 | 20,000원 | 2021년 | ISBN 978-89-6187-672-8

조선총독부는 강점 기간 내내 조선인 발행 매체의 활동을 통제했다. 무단통치기에는 매체 발행 자체를 금지했으며, 문화정치 실시 이후에는 매체 발행을 허용하면서 통제의 수위와 방법을 조정했다. 일제의 언론통제는 단순히 비판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한 정치적 효과까지 노렸다. 일제 말기로 갈수록 언론통제는 더욱 강화되었지만, 끝내 조선어 기관지와 조선어 방송 채널을 없애지는 못했다. 이 책에서는 일제의 지배 정책 변화에 따른 언론통제의 수위와 방식, 그 결과가 보여주는 정치적 효과, 그리고 그 바탕에 깔려 있던 딜레마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일제의 언론통제가 식민지 지배 정책에서 차지했던 의미와 역할을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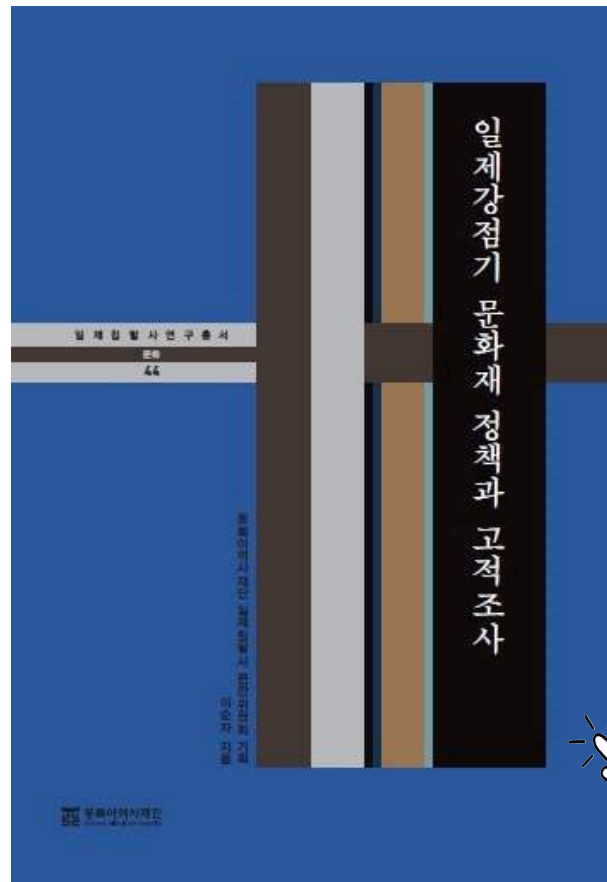
일제의 대중문화 통제

연극 · 영화 · 가요

이하나 · 박영정 · 한상언 · 문옥배 저

556쪽 | 20,000원 | 2023년 | ISBN 979-11-7161-052-5

대중문화란 일반적 의미의 민중문화가 아니라, 근대 대중매체의 출현과 함께 형성되어 대중이 향유한 문화를 의미한다. 일제의 식민지 대중문화 정책은 당대 일본 지식인의 대중문화관과 조선에 대한 식민지 경영의 방향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 책은 일제의 대중문화 정책을 담당한 통제 기구와 통제 법규를 살펴보고, 조선의 대중문화인 연극, 영화, 가요가 어떤 방식으로 통제되었는지 검토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식민지 대중과 민중을 대상으로 한 감성 통제의 성격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일제의 대중문화 정책이 식민지 사회의 감각과 정서를 관리하는 지배 방식으로 작동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일제강점기 문화재 정책과 고적조사

이순자 저 | 470쪽 | 20,000원 | 2021년 | ISBN 978-89-6187-67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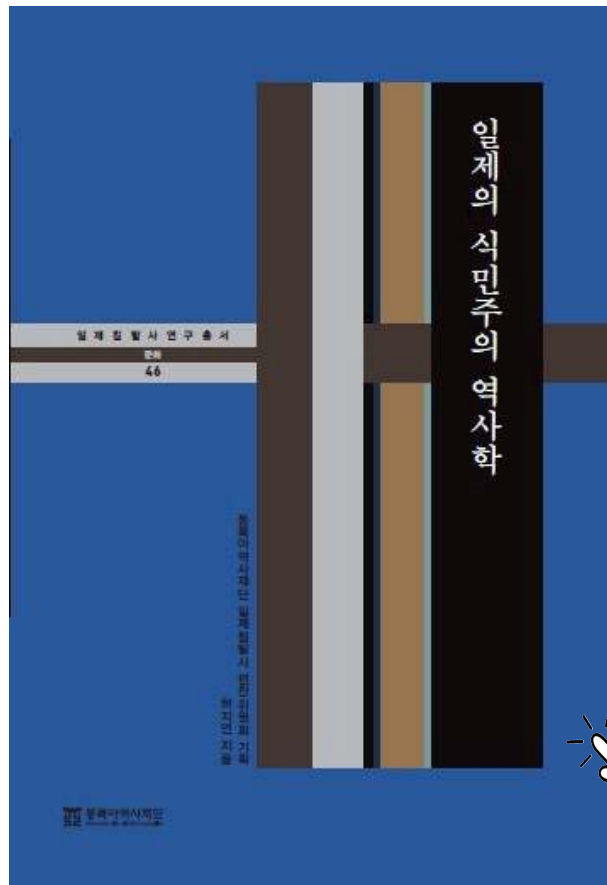
일제는 일찍부터 한국 역사에 관심을 가지며, 역사 속에서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찾고자 하였다. 그 일환으로 고적조사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 책은 기존 연구를 토대로 일제강점기 법령과 심의기구를 주요 검토 대상으로 삼아 문화재 정책과 고적조사 사업을 정리하고, 수집된 유물이 박물관 사업을 통해 어떻게 재해석되었는지를 통사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일어난 문화재 산일과 반출 실태를 검토함으로써 일제의 문화재 정책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밝힌다. 이를 통해 일제의 문화재 정책이 식민지 조선의 역사 인식과 문화유산 관리 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조선총독부의 일본어 보급 정책과 조선어 규제 정책

이준식 저 | 420쪽 | 20,000원 | 2023년 | ISBN 979-11-7161-0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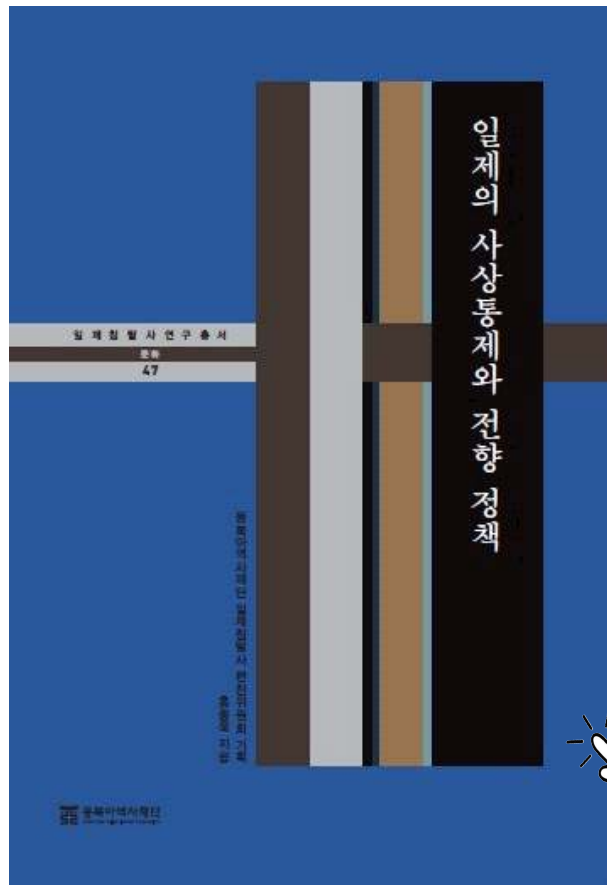
언어 정책이란 국가가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말을 통일·발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을 가리킨다. 다른 한편으로 언어 정책은 한 언어 공동체 내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언어 정책의 주체는 국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은 국가를 잃었으므로, 이 시기 언어 정책의 일차적 주체는 조선총독부일 수밖에 없었다. 조선총독부의 언어 정책은 조선어와 일본어의 위상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일제강점기 언어 정책으로 민족 언어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지만, 민족의 언어 한글은 살아남았다. 이 책은 조선인의 언어생활을 장악하는 데 실패한 일제강점기의 언어 정책, 곧 조선총독부의 일본어 보급정책과 조선어 규제 정책을 살펴본다.



일제의 식민주의 역사학

하지연 저 | 460쪽 | 20,000원 | 2023년 | ISBN 979-11-7161-05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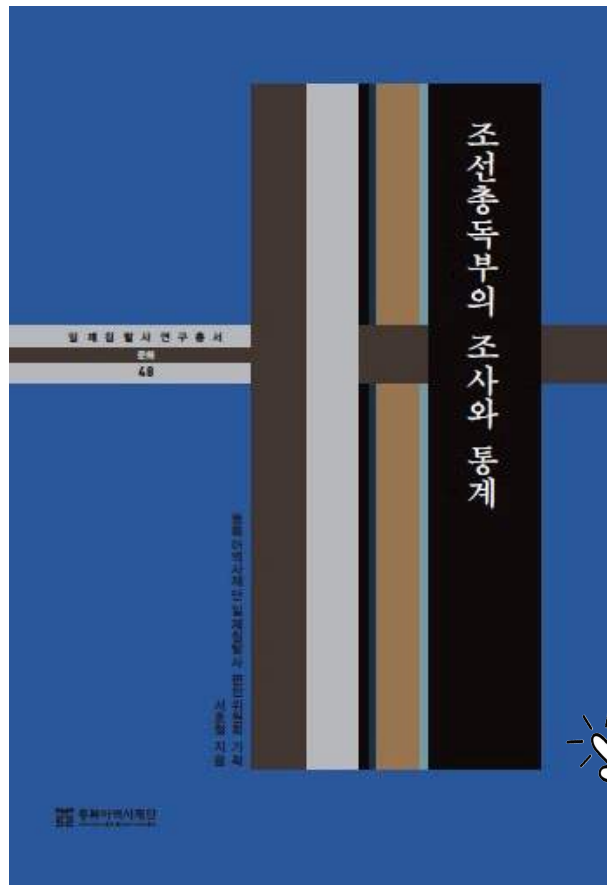
‘식민주의 역사학’이란 용어로 정리된 식민지 시기의 근대 역사학은 그동안 ‘식민사학’, ‘식민사관’ 등으로 혼재되어 사용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용어의 사용 양상을 정리하고, 식민주의 역사학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성립되었으며 어떤 논리와 제도 속에서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식민주의 역사학이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동했음을 확인한다. 19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50년에 걸친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대한 합리화와 반성의 결여, 그리고 은폐가 일본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는 현시점에서, 이 책은 그 시기 역사학자들의 논리와 인식의 오류를 파악하고, 식민주의 역사학이 식민지 지배의 논리와 역사 인식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일제의 사상통제와 전향 정책

홍종욱 저 | 380쪽 | 20,000원 | 2024년 | ISBN 979-11-7161-1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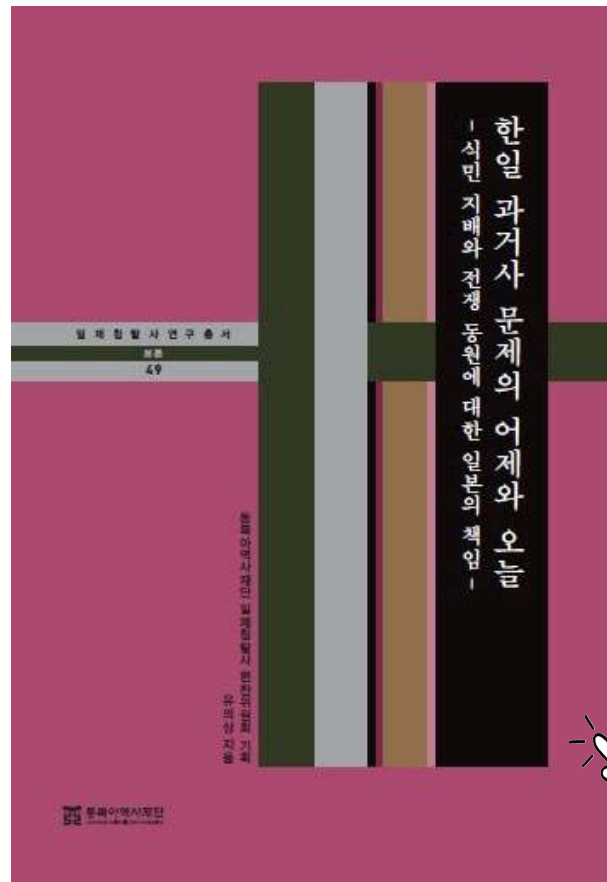
이 책은 식민지 시기 일제의 사상통제를 다룬다. 일제가 어떤 생각과 사고를 불온사상으로 규정하고 통제했는지를 살피기 위해, 먼저 사상통제의 핵심 법령인 「치안유지법」에 주목한다. 「치안유지법」은 국체 변혁과 사유재산 부정을 처벌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 주요 대상은 사회주의였다. 아울러 일제는 식민지 독립 역시 국체 변혁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즉 일제 사상통제의 대상은 사회주의와 식민지 독립운동이었다. 이 책은 「치안유지법」의 적용 양상과 사상통제의 실제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일제가 사회주의와 식민지 독립운동을 어떻게 불온사상으로 규정하고 억압했는지를 밝힌다. 식민 지배와 냉전은 20세기 세계사를 관통하는 두 가지 핵심 문제다. 이 책은 일제의 사상통제가 어디를 향했는지 추적한다. 이를 통해 반공과 식민주의라는 세계사의 모순이 중첩된 식민지 조선의 모습을 확인한다.



조선총독부의 조사와 통계

서호철 저 | 712쪽 | 20,000원 | 2024년 | ISBN 979-11-7161-134-8

이 책은 일제강점기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일제가 실시한 조사와 통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식민지 시기 조선총독부의 조사는 행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일본 정부, 학계, 금융기관, 재조선 일본인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그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 이 책은 개항 이후 통감부 시기부터 조선총독부 시기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조선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고 축적하며 식민지 통치에 활용해 가는 과정을 살펴본다. 특히 조선총독부의 공식 통계 생산 체계와 『통계연보』, 인구 조사와 호구 조사, 한반도의 자연 조사, 조선의 풍속과 생활 조사, 조선인의 신체 측정 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조선총독부의 조사와 통계가 식민지 조선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자,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고 실행하는 지식 생산의 수단으로 작동했음을 밝힌다.



한일 과거사 문제의 어제와 오늘

식민 지배와 전쟁 동원에 대한 일본의 책임

유익상 저 | 426쪽 | 20,000원 | 2022년 | ISBN 978-89-6187-745-9

이 책은 1945년 광복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일 과거사 문제가 어떠한 경위를 거쳐 형성되고 지속되어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한일 양국은 13년 8개월에 걸친 회담 끝에 국교를 정상화했지만, 식민 지배 청산과 청구권 문제는 여전히 양국 사이에서 서로 다른 해석과 갈등을 낳고 있다. 이 책은 한일회담과 청구권 협정, 식민 지배 피해배상 요구, 일본군‘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피해 문제, 사할린 한인·원폭 피해자·한인 B/C급 전범 문제 등 주요 과거사 현안을 폭넓게 살펴본다. 또한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과거사 문제가 외교 현안으로 자리 잡게 된 과정과 일본의 역사 인식, 식민 지배 책임론을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한일 과거사 문제의 어제와 오늘을 이해하고, 역사 갈등의 해소와 화해를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준다.